

# “尹, 조지호 경찰청장에 ‘국회의원들 체포하라’ 지시했다”

###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검찰 수사기록 공개 “여인형이 전화해 이재명 등 15명 이름 불러준 뒤 한동훈 추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 경찰청장의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 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다 기각되자 심판정에서 퇴장하는 등 반발했다.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9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 기일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나섰지만, 이날 변론기일이 서면 증거 조사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정점을 정리하는 자리라는 점을 듣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조 경찰청의 검찰 신문조서(피신조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 위한 증거’로 조 경찰청의 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조 경찰청)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경찰청!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이어진 5차례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 경찰청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법원 사법관이나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이름을 불러줬다”면서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법관의 진술 조서 일부도 공개했다.

군검찰조사에서 여 전 사법관은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법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각 진술과 명단이 일치한다”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 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치를 편성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 조서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록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됐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면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퇴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년 상반기 고성능GPU 2만장 확충...AI학과 무상교육 추진

### 당정, AI 경쟁력 강화 협의 추경서 관련 예산 증액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인재 육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국가 AI 인프라 조기 확충, 관련 연구 개발 환경 및 컴퓨팅 생태계 전반에 성장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민관 협력으로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일찍 개시하도록 하고,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2만장으로 10배 늘려 기업과 연구계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능 GPU 확보 계획과 관련해 김경만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200 위주가 될 것 같다. (엔비디아의) B200이 안정화되면 B200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엔비디아 쪽과 접촉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렇게 구축한 AI 인프라로 우리나라 자체 AI 기반 모델 10개가 오픈AI의 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AI를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정책위의장은 “교육당국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내 교육기관에서 졸업 후에 국내 산업에 봉사한다는 전제하에 무상 교육을 실

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AI 역량 강화 관련 항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해에 여야가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과방위에서 합의했던 AI 인프라 확충 예산의 증액 규모는 1조2000억원”이라며 “여기에 8000억을 더한 2조원 정도의 GPU와 AI 인프라 확충 강화 예산에 정부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40년 일하면서 15년을 개발을 해 봤는데 개발 업무를 주당 시간으로 정한다는 게 개발을 안 해본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연구개발 직군 중 5% 정도 되는 인력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자는 건데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각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법원법정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됐다.

인권위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이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긴급구제 사건을 논의한 끝에 각하하기로 했다. 강

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긴급구제 사건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회의를 마친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심의에 참여한 3명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